# 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ubject-based Systematization of National Librarie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1. 서 론
2. 국가도서관 체계정립의 논거와 원칙
   2.1 핵심 주제(학문)분야의 최우선 수용
   2.2 국가 법정종합계획의 적극적 반영
   2.3 지식정보 수입(소비)국 입장의 고려
   2.4 지식정보 수급의 정합성 강조
   2.5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 추구
3.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
   3.1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
   3.2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
   3.3 전략형 국가도서관 체계
4. 요약 및 결론

초 록

2008년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전문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법률, 환경)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 수행한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모형(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체계화, 수평적 연계형 체계화,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을 정밀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announced a national comprehensive plan for all libraries in August, 2008. The plan includes the re-establishment of a subject-based national library system as one of the major policy challenges. Based on the preceding study (an analysis on systematization and the gaps in subject-based national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this paper proposed three models: a centralized model focused on the NLK, a horizontally-linked model, and a long-term strategic model for subject-based national library systematization in Korea.

키워드: 국가도서관, 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도서관 체계, 주제별 국가도서관
Nation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Systematization of National Libraries, Subject-based National Library

---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5-27, 2009. 〔DOI:10.4275/KSLIS.2009.43.4.005〕

www.kci.go.kr

# 1. 서 론

한 나라의 국가도서관은 지식문화유산의 자존심인 동시에 자국을 대표하는 지식정보센터이다. 다만 고부가가치형 지식정보자원을 연구개발의 동력으로 삼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치열한 국제질서 속에서의 국가도서관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주제별로 체계화하거나 영국 및 일본처럼 국가대표도서관이 고답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주제별 정보수집과 제공서비스로 존재이유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주요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체계적 측면에서는 행정부 소관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NLK), 입법부 소속으로 사회과학자료 비중이 높은 국회도서관(NAL), 사법부의 법원도서관(SCLK)을 제외하면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인 농업과학도서관(KASDiL)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구성되지만 전자의 관장 직급이 사무관에 불과하고 후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과학기술정보를 총괄하고 핵심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주제별 격차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KISTI의 핵심인프라와 제공서비스가 캐나다국립과학기술정보기관(CISTI), 독일기술정보도서관(TIB), 프랑스국립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고, 의학분야는 미국립의학도서관(NLM), 독일국립의학도서관(ZB MED/Cologne)과 같은 구심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의학 및 관련분야의 지식정보를 총괄할 범국가적 주체가 절실하며, 농학분야도 선진국 국립농학도서관(미국의 NAL, 캐나다의 CAL, 독일의 ZB MED/Bonn)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윤희윤 2009, 89-94).

그래서 2008년 8월에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을 주요 정책과제로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전문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법률, 환경도서관) 건립의 방향성 정립, 설립안 마련, 운영전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국가도서관 체계에 대한 전략적 개조방안 내지 정립모형을 구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논거로 삼아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관으로 하는 집중형 체계화, 수평적 연계형 체계화,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 방안을 정밀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립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국가도서관 체계정립의 논거와 원칙

어느 나라든 국가도서관이 자국의 모든 지식문화재와 외국의 고품질 연구정보재를 동시에 수집・축적하고 제공・보존하기란 쉽지 않다. 비록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을 통하여 양면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주제별 국가(급)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

www.kci.go.kr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어느 국가도서관 및 전문도서관도 지식문화보고와 연구정보센터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 기존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재정립과 기능의 조정, 법적 지위의 격상 문제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체계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를 위한 논거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1 핵심 주제(학문)분야의 최우선 수용

현재 주제별 국가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식대국, 과학강국을 목표로 국가도서관 체계를 정립하려면 핵심 주제(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주제도서관의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분야, 학술논문, 학술지의 인용패턴과 수렴화를 매핑기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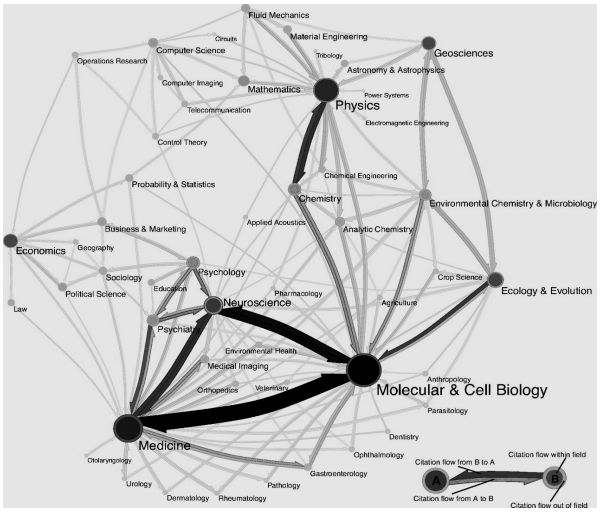
먼저 Moya-Anegón 등(2004, 138)이 2000년판 「Web of Science」의 DB(SCIE, SSCI, A&HCI)에 수록된 3,838종의 학술지에서 하나 이상의 스페인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서지레코드로부터 총 26,062개의 문헌(논문, 서지정보, 도서리뷰, 편집진 자료, 초록 등)을 출판한 172,562명의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25개의 범주로 대별한 결과, 각 학문(또는 주제)의 공인용지도(co-citation map)에서 첫 번째 영역을 대표하는 주제가 의학(M)이고 두 번째를 포괄하는 학문이 과학(S)이며, 마지막이 기술(T)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5년에 Hook 등(2005)이 총 7,121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용문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정보의 학제적 확산패턴을 매핑한 결과, 과학분야의 중심학문은 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사회과학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Leydesdorff와 Rafols(2007, 10)가 ISI DB의 주제범주에 기초하여 과학잡지의 글로벌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생의학이 핵심주제인 가운데 임상의학, 화학, 농학, 질병이 주요 노드로 링크되어 있으며, 임상의학에는 신경과학과 전염성 질병이, 화학에는 재료과학과 물리학이 차순위 노드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역시 의학과 기초과학이 핵심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에는 Rosvall와 Bergstrom(2008, 1121)이 6,434,916개의 인용문헌과 연계되어 있는 학술지 6,128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분야의 링크와 노드를 매핑한 결과, 〈그림 1〉처럼 분자·세포생물학, 의학, 물리학, 신경과학, 지구과학, 생태학과 진화, 경제학 등이 학문적 노드로서의 입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경제학을 제외하면 모두 과학분야다.

따라서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대상주제를 결정할 때는 과학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학분야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대별할 수 있고, 학문 또는 주제별로 더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존재여부, 선진국의 운영사례, 학문적 중심성, 학술지 종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4개로 군집한 핵심주제(과학과 기술, 의학과 생명과학, 농학과 농식품, 사회과학과 경제학)를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림 1〉 인용패턴을 이용한 과학지도

## 2.2 국가 법정종합계획의 적극적 반영

2008년 8월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도서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립·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은 법정계획인 동시에 종합계획과 지침계획이다. 이 계획의 8개 추진전략 중에서 4번째인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의 주요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를 간추리면 〈표 1〉과 같다.

이처럼 국가수준의 주제별 전문도서관 설립을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 배경은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국가 지식자산의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 관리와 정보수입국 입장에서 주제별 국내 대응기관의 필요성'에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3대 추진과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전문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법률, 환경) 건립의 방향성 정립, 설립안 마련, 운영전략 수립이며,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안은 〈표 2〉와 같다. 요컨대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은 KISTI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국가의학도서관은 설립하며, 나머지 3개관(농학, 법

〈표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을 위한 전략과 과제

| 추진전략 | 주요 정책과제 | 세부과제 |
|---|---|---|
| 4.1 주제 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운영 | 국립 과학기술·농학·의학도서관 등 설립 추진 | ▪ 주제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립 과학기술·농학·의학·법률·환경도서관 건립 방향성 정립<br>▪ 주제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설립(안)<br>▪ 주제분야별 국가 대표 전문도서관 운영 전략 수립 |
| | 각급 행정기관 자료실의 주제분야별 전문도서관화 추진 | ▪ 국가 정책정보서비스의 체계화<br>▪ 행정기관 도서관의 주제별 전문정보서비스 기반 마련<br>▪ 국가 행정기관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유통정책의 협의기구 마련 |

www.kci.go.kr

〈표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안)

| 도서관명 | 관할주체 | 설립방안 | 비 고 |
|---|---|---|---|
| 국립과학기술도서관 | KISTI | KISTI에서 과학기술정보관리·유통 전담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3항 |
| 국가의학도서관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의학관련기관에 설치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와 협력운영 | 영국 National Electronic Library Medicine 벤치마킹 |
| 국가농학도서관 | 농수산 식품부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을 국가 농학도서관으로 격상 | 지위격상 |
| 국가법률도서관 | 법무부 | 법무부 도서실을 국가 법률도서관으로 격상 | 〃 |
| 국가환경도서관 | 환경부 | 환경부 환경정보자료실의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을 국가 환경도서관으로 격상 | 〃 |

률, 환경)은 행정부처 소속의 도서관(실)을 국가도서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방향성은 국가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상징성, 국가 지식정보관리의 전문성과 활용성, 미래지향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으나, 일부 주제별 도서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제의 범위 및 포괄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국가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 자료수집 및 봉사대상의 모호성, 잠재적 수요총량의 편차성, 기존의 국가도서관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대행 가능성, 다른 선진국의 주제별 도서관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설령 해당부처의 요구와 기대가 실재하더라도 중복성이 높은 반면에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법률분야의 경우, 법률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종합법률도서관과 연구용 법률도서관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례가 입법부의 NAL와 사법부의 SCLK이며, 후자는 법학전문대학 소속의 법학도서관이다. 그 외에도 법무부 및 법제처의 법률자료실이 있다. 물론 NAL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법률 및 관련자료를, SCLK는 판례중심의 법률정보를, 법학도서관은 교육연구용 법률자료를, 행정부처 법률자료실은 입법·법제·법령해석 중심의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저마다 법률종합정보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의 국가법률도서관 설립안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는 전자공학이나 건설·건축보다 왜소한 응용과학의 하위주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집자료의 범위나 수요도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 생태계 및 환경문제가 국내외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그것이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의 국가도서관 체계분석에서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의 법률도서관과는 별개로 행정부에 국가법률도서관을 두거나, 중앙부처에 국가환경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주제별 도서관의 설립안 가운데 과학기술, 의학, 농학은 국가도서관 체계정립의 기본원칙에 적극 반영하되 법률 및 환경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 지식정보 수입(소비)국 입장의 고려

세계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는 2006년을 기

www.kci.go.kr

준으로 독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순인 반면에 수입국은 미국, 독일, 중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순이며, 한국은 각각 11위(약 2.7%)와 13위(약 2.5%)에 머물렀다(WTO 2007, 12). 그러나 지식정보를 대표하는 출판물(도서, 신문, 잡지)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국가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의 순이다(European Union 2007, 61-62). 일본의 2005년도 총수출액은 약 144억 220만엔(1,240.3억엔)에 달하였으며, 약 78.1억원에 달하는 출판물을 한국에 수출하였다(Japan Book Publishers Association 2005, 7).

그렇다면 한국은 대중자료(도서, 잡지)와 고품질 연구정보(단행본, 학술지, 웹DB 등)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가. 이를 분석하려면 도서관과 정보센터, 국가기관, 연구개발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구, 개인 등이 수입하는 총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범국가적 통계데이터가 없어 모든 제품의 총수입액에서 지식정보 수입액의 비율을 추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도서 수출입 통계와 연간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외국자료 구입비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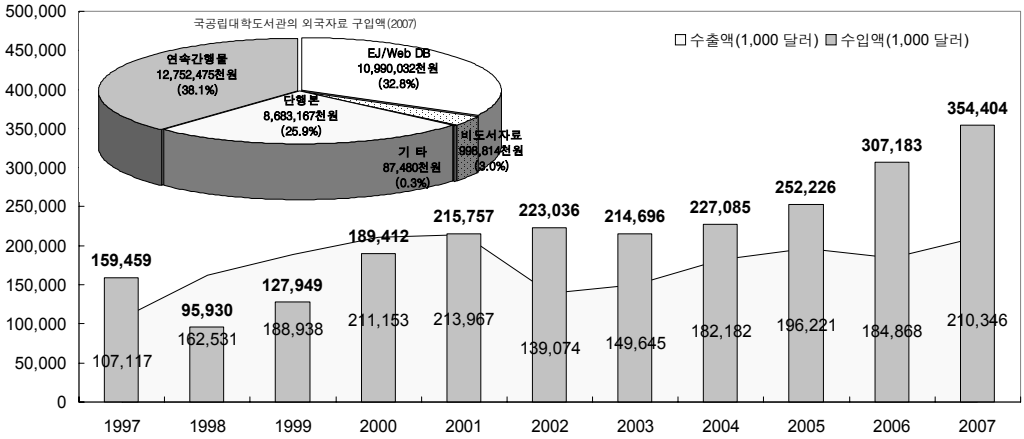
먼저 일반도서 수출입 내역은 관세청이 매년 집계하지만 통계에 포함되는 자료는 품목분류 코드에서 일반서적과 아동도서를 합산한 수치로 제한되어 있다. 지난 11년간(1997~2007) 출판물 수출입액을 비교하면 〈그림 2〉처럼 수출(대부분이 인쇄 하청분임)은 약 96.3%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은 122.2%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 외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하여 2,547.8천달러 증가한 210,346천달러(약 2,542억원인)인데 비하여 수입은 4,722.1천달러 증가한 354,404천달러(약 4,253억)로 수지 불균형이 1,729억원에 달한다(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48).

그런가 하면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외국자료 수입예산을 근거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수입총액을 추계할 수 있다. 2007년에 국공립대학도서관(총 47개관)이 자료수입에 지출한 예산(2008, 321)은 약 335.1억원(1개관당 평균 7.1억원)이며, 자료유형별 지출액은 〈그림 2〉와 같다. 사립대학도서관(총 200개관)의 경우, 국공립대학도서관 1개관당 평균 지출비의 80%를 적용하면 약 1,136억원, 전문대학도서관(총 161개관)은 최저 약 30%를 적용하면 342.9억원, 연구정보센터(STIMA 소속의 54개관)에 역시 30%를 적용하면 115억이므로 총 1,92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많은 각종 연구·실험기관, 의료기관, 민간 기업체 등의 외국자료 수입액, 개인의 학술지 구독 및 단행본 구입, DDS 지출비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대학도서관 및 연구정보센터가 지출하는 총예산의 20%만 적용하여도 약 385.8억원에 달하며, 또한 특허정보, 표준 등의 수입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도서관계 및 관련기관이 외국자료를 수입하는데 따른 국부유출은 최소한 6,568억원(관세청+대학도서관+연구정보센터+기타 기관 및 개인)을 상회할 것이며, 이것은 지식정보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되거나 해소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간 외국정보를 얼마나 입수하며 그에 따른 국

www.kci.go.kr




〈그림 2〉 한국의 도서 수출입액 증감추이와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외국자료 구입액

부유출의 총량을 조사・발표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 강국,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아닐 수 없다. 환언하면 정보수입국의 입장에서 최적의 연구정보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중복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외국정보를 주제별로 총괄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2.4 지식정보 수급의 정합성 강조

어느 국가든 지식정보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원칙 중의 하나는 이용자의 현재적 및 잠재적 수요와 도서관의 공급을 최적화하는, 소위 정합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대중용 지식문화재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당위는 수요집단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며, 반대로 대학도서관이 고수준의 연구정보재를 공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명분은 주류고객이 연구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의 구축은 대중을 감안하되 다분히 연구집단을 겨냥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수요분석을 전제로 공급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요, 외국정보 의존도, 입수시간과 비용, 입수처 등에 대한 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98년에 Tenopir와 King은 미국 대학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학술논문의 독서에 따른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약 66%는 강의와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33%는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14%는 연구속도를 높이고, 16%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Tenopir & King 1998). 2003년에 호주 교육과학고용부가 연구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60%가 '사독형 인쇄잡지'를 필수 정보자원으로 인식하였으며, 매체별로는 학술지 논문, 회의논문, 보고서의 순으로 선호하는 가운데 과학・의학계의 71%와 인문사회・예술계의 46%가 학술지 논문을 중시하였다(Houghton, et al., 2003, 84-106). 2005년 2월에 토시모리 등(歲森 敦 外 2005, 74-78)이 관서문화학술연구도

www.kci.go.kr

시의 연구자 696명을 대상으로 이용행동을 조사·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정보매체는 인쇄잡지, 국내 학회 및 연구회지, 특허, 전자잡지의 순으로 높았고,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보원은 인쇄잡지와 전자잡지로 밝혀졌다. 그리고 2006년에 Kurata 등(Kurata, et al., 2006)이 총 1,776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논문 독서매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쇄잡지와 전자잡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가 자체 조사한 결과, 외국정보 의존도는 사회과학이 50%~70%, 기술과학이 9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5월말부터 2주간(5. 31~6. 13) 총 66명의 교수(인문계 14%, 사회계 28%, 경영경제 8%, 교육 3%, 자연계 16%, 공학계 15%, 의학계 11%, 예체능계 4%)를 상대로 해외 학술정보의 수요 및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해외 학술연구정보의 순위와 비율이 인쇄형은 학술지·학위논문·연구보고서·단행본의 순으로, 전자형은 웹DB·전자잡지·e-Book·인터넷 사이트의 순으로, 전체로는 인쇄형 학술지, 웹DB, 전자잡지,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 단행본의 순으로 높았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의 경우, 1994년 아일랜드의 Forfás(2005, 19)가 대학 연구자를 조사한 결과, 소비시간은 평균 35%~50%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 Tenopir와 King이 추정한 과학자의 1분당 시간비용인 0.805 달러로 나타났다(http://www-jime.open.ac.uk/book-reviews/tenopir.html). 2003년에는 캐나다의 연방과학기술도서관연맹(Stark and Bourgeois 2003, 8)이 7월부터 6주간 연방 산하의 6개 조직체에 소속된 과학자(2,345명)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약 87%가 학술지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였으며, 연간 인터넷 정보탐색이나 과학논문의 독서활동에 투입하는 기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다. 2004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연구소(2004, 182)가 교수의 직무별 소비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구활동의 비중이 46.5%로 가장 높았다. 2005년에는 미국 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이 2,500명 이상의 교수를 대상으로 업무부담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시간이 전체의 약 58%에 달하는 가운데 그것의 약 30%는 연구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소비하였다(Akie & Baron 2004, 215).

마지막으로 2006년에 윤희윤(2006, 100-101)이 교수의 해외 학술연구정보 입수경로를 분석한 결과, 소속 도서관을 통한 입수가 인쇄형 59%, 전자형 48%로 가장 많았고, 입수비중은 전체의 50% 이상을 입수하는 비율이 64%에 달하였으며, 전공별로는 의학(56%), 사회과학(43%), 자연과학(39%), 공학(37%), 예체능계(15%)의 순으로 높았다. 소속 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구독(52%), 해외기관 DDS(28%), 해외거주의 지인(9%), 다른 도서관을 통한 DDS(8%)의 순으로 높았다.

요컨대 국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집단은 사독형 학술지, Web DB, 보고서, 단행본 등을 필요로 하며, 모든 분야에서 외국정보 의존도가 절반을 상회한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전체 시간 가운데 35%~60%를 연구활동에 할애하고, 그것의 30% 정도는 정보수집과 이용에 소비하며, 소속 도서관을 통하여 연구정보를 입수하지

www.kci.go.kr

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구독, 국내외 DDS 활용 등으로 입수한다.

따라서 국가도서관과 연구정보센터 등이 연구집단의 정보수요에 부응하려면 학술지 중심의 외국정보를 적시에 수집・제공해야 연구자의 시간가치와 논문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개별도서관이 고가의 외국 학술지와 Web DB를 입수하려면 각각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복구입도 불가피하며, 특히 전자잡지와 Web DB는 학문연구의 후속세대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보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국가도서관은 연구정보가 극히 취약하고 국가수준의 전문도서관도 모든 연구집단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 주제별 국가도서관은 유력한 대안일 수 있으며, 수급을 정합하는 방향으로 다른 국가도서관의 관계를 체계화할 때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2.5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 추구

정보수입국 입장과 정보수급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주제별 국가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대상주제를 결정할 때 그리고 다수의 국가도서관을 상대로 체계화 전략을 수립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제선택이 부실하거나 산만하면 수급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고, 수집기능과 서비스 역량을 집중화하지 못하면 중복과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최근 학술연구분야의 커뮤니케이션 동향은 출판시장의 황금규칙인 '모든 STM 학술지는 디지털 포맷이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대변하고 있다. 이 규칙의 키워드는 'STM, 학술지, 디지털 포맷, 온라인 접근'인데, 부언하면 모든 학술연구의 핵심분야는 STM이고 자료유형은 학술지이며, 포맷은 디지털이고 접근방식은 온라인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선진국 중심의 세계 STM 정보 지배력은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 및 체계화에 선택과 집중의 당위성 논거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세계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G8 및 OECD 중심의 선진국은 과학기술 수준도 최상위에 속하며, 이들이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STM 출판물을 양산하고 그것을 자국의 과학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외국에 독점형태로 수출함으로써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령, 호주는 세계 과학논문의 3%를 생산하지만 자국에서 이용되는 인쇄형 및 전자형 학술정보의 약 80%~90%는 수입에 의존한다(Houghton 2000, 29-31). 일본도 인쇄형 구입잡지의 60%가 STM 학술지이고 그것의 60%(전체의 35%)는 서양 학술지이며, 자료비의 70%가 STM 학술지 구입에 사용되고 그것의 90% 이상은 서양 학술지 확보에 투입하고 있다(歲 森敦 2004). 다만 국내의 경우는 2004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4, 108)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영어권 외의 요구가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의 순으로 나타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학술연구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의 취약성도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국내의 학술연구정보를 담당하는 3대

www.kci.go.kr

주체로는 대학도서관과 KERIS, 연구정보센터와 KISTI, 국가도서관을 들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단일 기관으로는 KISTI가 단연 우위에 있다. 그러나 KISTI는 법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부적 제약요소와 내부 역량의 부족으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Hussein Rostum 2003, 19) 선진국의 유사기관에 버금가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국내의 모든 연구집단을 봉사대상으로 삼는 STM 정보기관이 아니라 연구원의 부속도서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급 학술연구정보의 대외 의존도가 극심하고, 국내의 논문생산성과 대외적 영향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70%~95%가 외국 논문이며, 대학 연구자가 국가 연구경쟁력 지표인 SCI 논문의 절대 다수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KISTI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역량이 매우 취약한 점에 주목하면 STM 중심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을 포함한 전략적 체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주제와 서비스 주체를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화할 때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 3.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

어느 나라든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지식정보를 최대한 수집·보존하여 당대에 제공하고 후대를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데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자국의 출판물에 머물지 않고 지구촌의 학술연구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하는 이중적 책무와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도서관의 경우, 학술연구계를 위한 고품질 연구경쟁재는 고사하고 국민을 위한 대중용 지식문화재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내생적 동인과 외생적 요인은 다각도로 거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조에 부응하지 못하는 후진국형 국가도서관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국가도서관 체계의 취약점 극복하고 고가의 외국정보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며,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고품질 주제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부존 자원화하며, 지식정보의 제국화 전략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식강국화를 지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표 3〉 각국 과학기술도서관의 교육(학술연구)기관 고객서비스 비율(%)

| 도서관(정보센터) | 교육(학술연구)기관의 고객 비율 | 비 고 |
|---|---|---|
| NLM(미국) | 60 | 2003년 말 기준 |
| CISTI(캐나다) | 50 | 〃 |
| BL(영국) | 50 | 〃 |
| INIST(프랑스) | 30 | 〃 |
| JST(일본) | 15 | 〃 |
| KISTI(한국) | 31.4 | 2006년 말 기준 |

www.kci.go.kr

전술한 5대 논거와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정립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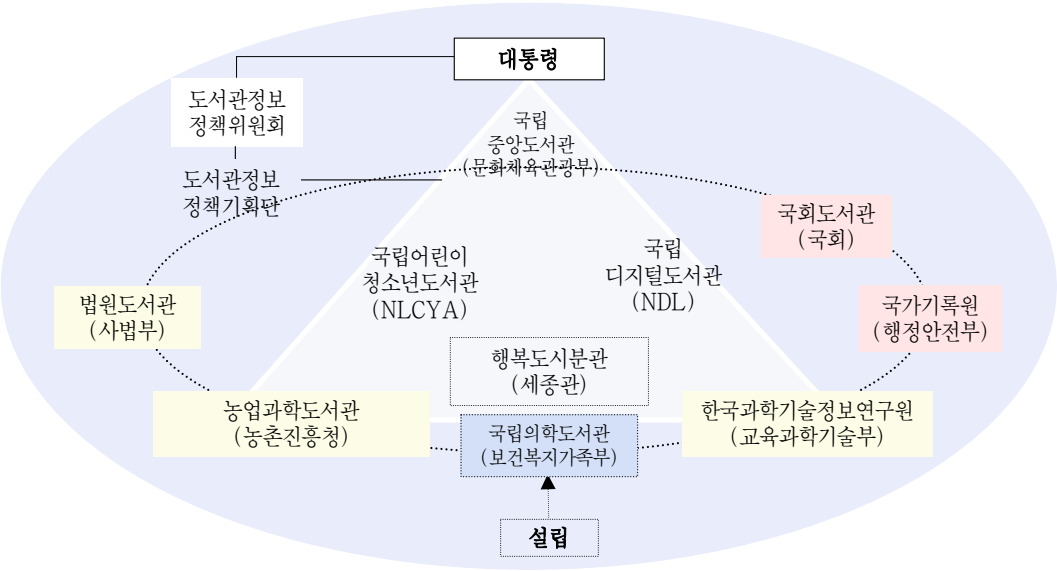
### 3.1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

이 방안은 국가대표도서관인 NLK를 실질적 중심관으로 설정하고 다른 부처 산하의 주제별 도서관에 대한 통괄 및 협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한 사례로는 영국(BL), 프랑스(BnF), 일본(NDL)을 들 수 있다. 기존 국가도서관 체계의 현실적 구조와 역학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는 집중형 체계화의 전모는 〈그림 3〉과 같다.

부언하면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모형의 기본구조는 NLK를 실질적인 중심관으로 하고 산하의 NDL(국립디지털도서관) 및 NLCYA(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와 삼각축을 형성하되, 전국적으로는 다른 행정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KISTI, 농촌진흥청의 KASDiL, 행정안정부의 NAK(국가기록원), 설립할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Medical Library), 입법부의 NAL, 사법부의 SCLK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형태이다.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에 NLK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견고해지고, 상이한 주제별 도서관과의 협력활동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집중형 체계화 방안이 설득력을 담보하려면 다음에 적시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도서관 체계상 NLK는 법적 및 실질적으로 우월적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즉, NLK는 국가도서관 체계에서 중앙(심)관이 되고 모든 다른 도서관은 구성단위의 개체로 존재해야 하며, 집단별 내지 부처별 이기주의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호혜정신과 협력의지가 필요하다.




〈그림 3〉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전모

www.kci.go.kr

둘째, 국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직결되는 STM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할 구심체가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NML을 우선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인 국내외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격차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 영국, 독일은 국립의학도서관을 운영하며, 일본도 재단법인 형태의 IMIC가 존재하고 NIPH/CIRL가 있음에도 정부에 가칭 '국립생명과학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을 포괄하는 사단법인의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가 있지만 범국가적 의학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역부족이다. 또한 KISTI가 의학잡지를 상당히 수집하고 있으나, 역시 캐나다의 CISTI나 프랑스의 INIST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에 상위의 관할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NLK는 국립의학도서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셋째, KISTI는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위상에 걸맞게 인력확충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내의 KASDiL은 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3급 이상으로 높이고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양자가 모체기관을 초월하는 국가수준의 STM 전문도서관이 될 수 있다.

넷째, NLK는 입법 및 의회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구심체로서의 법원도서관, STM 정보를 취급하는 KISTI, 농업 및 관련정보를 다루는 KASDiL, 설립할 NML, 그리고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제별 자료수집 및 서비스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화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간추리면 〈표 4〉와 같다.

### 3.2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

이 방안은 실정법상 NLK가 국가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과 주제별 도서관을 대등한 개체로 간주하여 수평적 연계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 사례로

〈표 4〉 집중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강점과 약점

| 강 점 | 약 점 |
|---|---|
| • NLK의 명목상, 실질적 중심성과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국가도서관 체계가 정립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연계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진다. | • NLK의 인력과 예산규모, 활동과 인식도 등을 감안하면 국가도서관 체계를 주도하는 중앙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 NLK는 다른 행정부처 및 입법·사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과 협력함으로써 자료와 서비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 • 입법·사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과 행정부처의 다른 도서관이 협력에 미온적일 경우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 • 국가도서관이 지식문화재와 더불어 연구경쟁재를 수집·제공하게 됨으로써 존재의 기반과 이유가 충실하게 된다. | • 고품질 외국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보수입국 입장에서 국부유출과 부존 자원화에 대비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
| • 기존의 국가도서관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모체기관이 상이한 국립도서관 및 국가수준급 주제별 전문도서관과의 협력과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하다. | •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STM 지식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없으며, KISTI 및 KASDiL의 위상강화도 쉽지 않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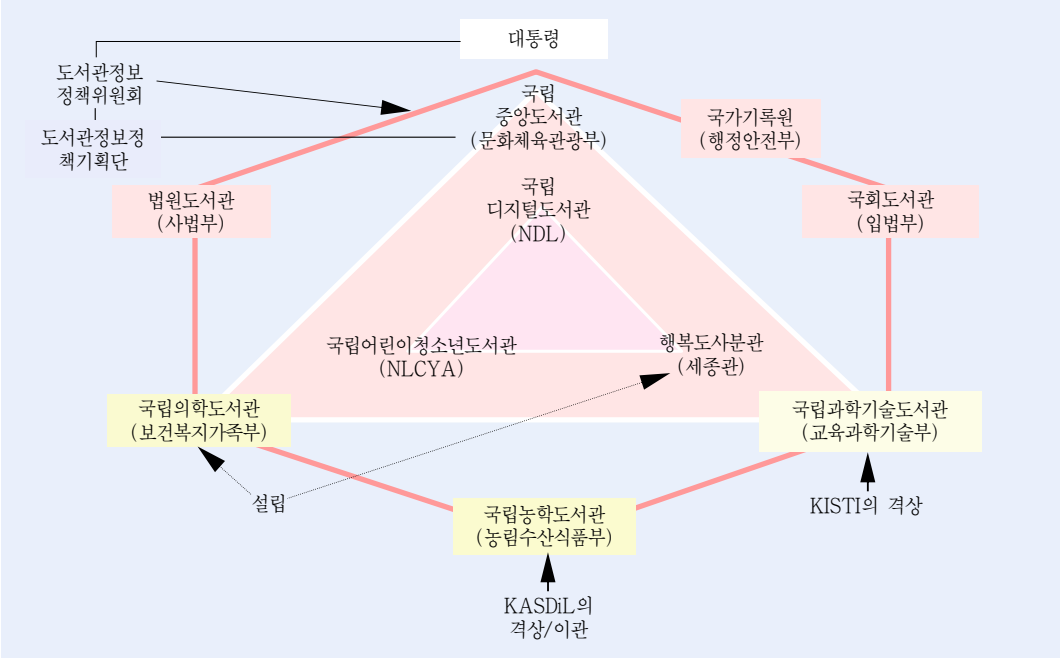
www.kci.go.kr

는 미국(LC-NLM/NAL/NLE)과 독일(DNB-TIB/ZB MED/ZBW)을 들 수 있다. 그 배경은 NLK의 고품질 STM 정보수집 및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다른 국가수준급 주제별 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을 통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입법부의 NAL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계형 방안은 집중형과 비교할 때, 명목상 NLK가 중심관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내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행정부처 소속의 국가수준급 주제별 도서관과 수평적 대등관계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집중형에서는 STM 정보분야의 국가도서관을 NML로 한정한 반면에 연계형은 KISTI 및 KASDiL을 주제별 국가도서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의 구조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적시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도서관 체계정립의 논거와 원칙에서 언급한 것처럼 STM 중심의 주제별 체계를 확립해야 국부유출의 최소화, 고품질 외국 연구정보의 부존 자원화, 국가 및 연구경쟁력의 강화, 지식강국화, 수급의 정합성 및 경제성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3대 주제(과학기술, 의학, 농학)를 대상으로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학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NML을 설립하고, 과학기술분야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ISTI를 국립과학기술도서관(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으로 격상시키며, 농학분야는 농촌진흥청의 부속도서관




〈그림 4〉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전모

www.kci.go.kr

인 KASDiL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농학도서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도서관이 자국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인 동시에 심장이라면 STM 정보는 연구개발의 혈액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든 과학기술도서관이 부재하거나 충실하지 못하면 정보유통서비스에 대한 심장으로서의 펌프기능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심장이 온전하더라도 STM 정보가 정체되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여 경추가 틀어지고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수한 과학기술도서관이 부재하면 과학기술 경쟁력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복수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료수집의 대상과 서비스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KISTI가 수집하는 약 340종의 의약학 학술지는 구독을 중단하고 NML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수산・식품분야의 127종도 구독을 중단하는 한편 NLA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가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고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정책에 관해서는 NLK가 중심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이 존재할 경우에 의회 소속으로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구심체인 미국의 LC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NLK는 법적으로 국가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NSTL, 보건복지가족부의 NML, 농림수산식품부의 NLA와 대등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원화된 국가도서관 체계에서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호혜정신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른 국가도서관인 입법부의 NAL, 사법부의 SCLK, 행정안전부의 NAK는 저마다 국가대표기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각 사회과학, 법률 및 법학, 국가문서와 행정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할 때 연계형 체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운영으로 연구집단을 위한 STM 정보서비스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 연구정보의 분산-집중형 수집・제공이 가능하여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부존 자원화에도 유리하다. 특히 연구집단은 주제별 연구정보 입수채널의 확보로 연구시간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논문생산성과 연구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연계형 체계화 방안은 〈표 5〉에 간추린 것처럼 강점에 못지않게 약점도 많다. 따라서 약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때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모형으로 적합할 수 있다.

### 3.3 전략형 국가도서관 체계

이 중장기 방안은 연계형 체계정립의 기본구조 가운데 NLK・NAL・NAK를 기능적 내지 시스템적으로 통합・조정하고, KISTI의 지위를 주제별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정보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센터로 격상시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도서관 위주의 체계정립을 넘어

www.kci.go.kr

〈표 5〉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강점과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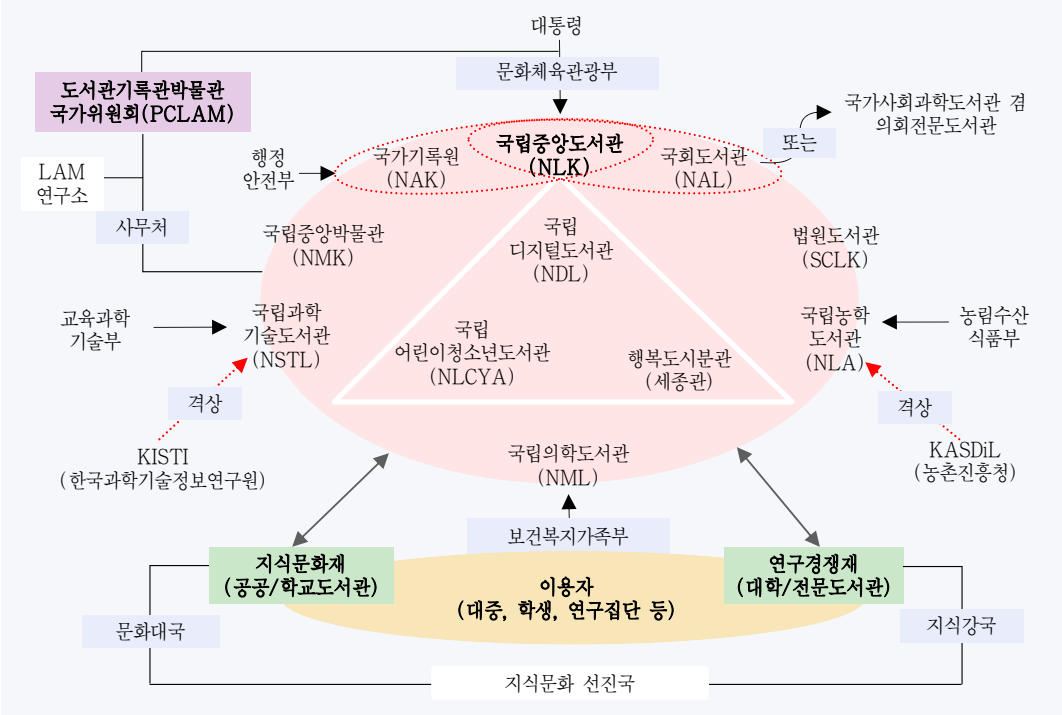
| 강 점 | 약 점 |
|---|---|
| • NLK, NAL, 복수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이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 내에 존재할 경우에 저마다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존립기반이 견고해지고 국가적 역할도 강화할 수 있다. | • NLK가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 내에서 명목상 및 실질적 중심관으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거중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능적 중복성을 초래하게 된다. |
| • 분산-집중형 주제별 국가도서관은 외국 정보의 중복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유리하다. | • 주제별 국가도서관(NML, NSTL, NLA)이 존재하더라도 부처 및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고가의 STM 학술지를 중복 수입할 가능성도 있다. |
| • 연계형을 통한 고품질 STM 정보의 체계적 수입과 부존자원화는 정보제국화에 대비하는 한편, 당대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고 학문 및 연구 후세대의 안정적 접근을 담보한다. | • 입법·사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과 NLK 및 행정부 소속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상호간에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고, 협력기능도 부재하여 방만한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 |
| • NLK, NAL,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수평적 연계기능이 강화되면 연구정보서비스의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주제별 국가도서관 설립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KISTI 및 KASDiL의 격상을 통한 국가도서관화도 난제에 속한다. |
| • NML이 설립되고 KISTI와 KASDiL이 국가도서관으로 격상되면 대학 및 기업체의 더 많은 연구자를 현재적 및 잠재적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다. | • 기존의 국가도서관 체계를 집중형으로 개편하는데 따른 주도권 논쟁이 가열되고, 거부감 내지 반발기류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
| • 연구집단은 물론 일반 국민도 양질의 주제정보를 접근·입수하는데 유리하다. | • 모체기관이 상이한 국가도서관이 상호협력과 연계가 부실하거나 단절되면 세금낭비가 초래된다. |
| • 국가도서관이 지식문화재와 더불어 연구경쟁재를 수집·제공하게 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기반이 견고하게 된다. | • 고가의 고품질 외국정보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보제국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

한국 지식문화기관을 전략적으로 체계화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의회 산하의 LC와 연방정부 소속의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MLS), 영국의 박물관·문서관·도서관 국가평의회(MLA),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 Canada)와 CISTI, 일본의 NDL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의 전략적 체계화 방안은 상술한 집중형 및 연계형과 비교하면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 사고와 파격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것은 관행과 역사성을 고집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검토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정보제국화 전략, 지식정보 수입국 입장, STM 정보의 부존화와 연구경쟁력 강화, 국가 지식문화기관의 공분모와 연계성, 통합형 국가정책기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자체에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전략적 모형이다. 이 모형의 최대 특징은 대다수 국가도서관과 국가수준의 지식문화기관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도 전향적으로 개편하는데 있는 바, 그 전모를 도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이러한 전략적 개편모형을 수용하려면 다음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어느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도서관의 이원체제는 당사자들의 거부반응과 극히 낮은 실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NLK와 NAL의 전격적 통

www.kci.go.kr




〈그림 5〉 전략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전모와 지향성

합 내지 기능적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미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하면 NAL로 통합하고 기타 선진국(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모형을 적용하면 NLK로 통합해야 하지만, 행정부 중심의 국가체제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보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NLK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NLK의 위상을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확립하고 NAL은 국가사회과학도서관 겸 의회전문도서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양자를 조직적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인력과 장서가 선진국 국가도서관 수준에 근접하며 NLK 관장의 직급을 격상시키는데도 유리하다.

둘째, NLK와 NAK도 국가 지식문화기관이라는 공분모 차원에서 체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NLK는 문화체육관광부에, NAK는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주요 국가의 국립공문서관 행정체계를 비교한 〈표 6〉을 보면 미국의 NARA는 연방정부에, 영국은 법무부에, 독일의 Bundesarchiv 및 프랑스의 Archives Nationales는 문화관련 부처에,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은 내각부 소속의 특정독립행정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도서관과 국립문서관을 통합한 사례로는 캐나다의 LAC와 이라크의 INLA(Iraqi National Library and Archive)가 있다. 따라서 양자를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성사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유럽 선진국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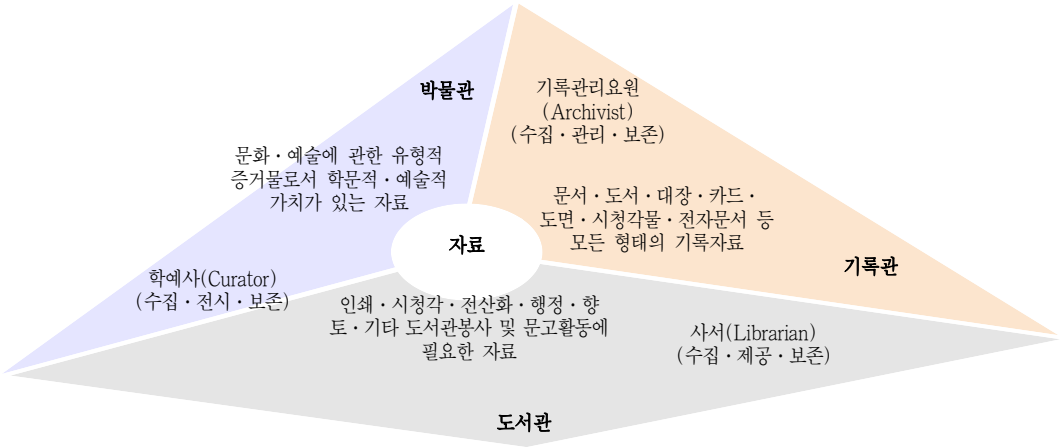
〈표 6〉 주요 국가의 국립공문서관 행정체계 비교

| 국 가 | 국립공문서관 명칭 | 주무부처 | 비 고 |
|---|---|---|---|
| 미 국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 연방정부 | 연방정부 독립기관 |
| 캐나다 | Library and Archive Canada(LAC) | 문화유산부(MHOL) | 국립도서관과 통합 |
| 영 국 | The National Archive(TNA) | 법무부(MOJ) | 정부기관 겸 에이전시 |
| 독 일 | Bundesarchiv | 연방문화매체담당관(BKM) | 연방기관 |
| 프랑스 | Archives nationales(AN) | 문화매체부(MCC) | 국가기관 |
| 일 본 | 國立公文書館(NAJ) | 내각부 | 독립행정법인 |
| 한 국 | 국가기록원(NAK) | 행정안전부 | 국가기관 |

셋째, 국내외 STM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제공기능을 주도해야 하는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NML을 설립하고, 농촌진흥청 소관의 KASDiL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NLA로 격상시키며,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ISTI를 독일의 TIB/UB처럼 국가도서관으로 격상시키거나 미국의 NIH/NLM, 캐나다의 NRC/CISTI, 그리고 프랑스 CNRS/INIST처럼 국가연구위원회 소속으로 편제시켜 연구수행 및 도서관 기능을 겸하는 지식정보연구센터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KISTI의 경우, 후자를 채택하려면 기초기술 및 공공기술연구회 산하의 여러 연구소를 가칭 '국가연구위원회' 아래에 군집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직적 위상도 다른 연구소와 대등해야 한다. 반면에 전자는 KISTI의 하부조직 가운에 정보유통본부를 NSTL로 격상·독립시키는 방안으로 내부의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후자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 물론 의학 및 농학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기능은 연계형 방안과 마찬가지로 각각 NML과 NLA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대표도서관, 입법부 및 사법부의 국가도서관, 복수의 주제별 국가도서관을 포괄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가장 필요한 또 다른 메뉴는 국가 지식문화유산을 취급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연계·밀착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의 수립·심의·조정·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은 자국의 지적, 정신적, 예술적 문화유산을 수집·제공·전수하는 주체이며, 이들은 〈그림 6〉처럼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라는 근친성과 연계성을 함축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직업사회, 법제장치, 행정조직 등에 반영되어 왔다. 또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가나 지역의 지식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제공하던 자료중심의 문화기관들이 나름의 정체성과 독립된 개체로 존속하여 왔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각각의 수집물이 가상공간으로 유통됨으로써 개별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대신에 '기록문화유산'과 '아카이빙'이라는 공분모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소위 3대 지식문화기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용 지식문화재와 학술용 연구경쟁재를 동시에 수집·제공하고 보존·전수하기 위한 상호협력 및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도서관 중심의 체계정

www.kci.go.kr




〈그림 6〉 국가 지식문화유산기관의 공분모와 상관성

립에 못지않게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지식문화기관의 중장기 정책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조정·의결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지식기반사회와 지식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 정보강국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문화기관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요컨대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가 배태하는 시너지 효과는 국제수준의 통합형 국가도서관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복성 투자로 초래되는 혈세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주제별 국가도서관을 통한 STM 정보서비스가 강화되어 연구경쟁력이 제고되고, 외국 정보의 중복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으며, 후속세대를 위한 체계적 부존 자원화에도 유리하다. 특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외연을 지식문화기관으로 확장하여 우산역할을 수행할 경우, 여러 국가기관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 지식문화재 및 연구경쟁재의 수집·보존과 접근·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형 체계화 방안은 〈표 7〉에 간추린 것처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사고와 자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난제가 많다. 따라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및 해당부처의 의지가 중요하며, 특히 지식강국과 문화대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단호한 의지와 전략적 결단이 있어야 채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안한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은 국내외에 국가도서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단초인 동시에 전략적 요체에 해당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도서관의 브랜드는 명성과 매력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전자를 대표하는 지표가 누적성과 역사성을 갖춘 방대한 장서에서 발원한다면 후자를 촉발하는 요소는 무결성 지식정보의 수집에 기반한 정보서비스이며, 양자에 충실할 때 최후의 보루 및 해결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의 후진국 및 수입국 입장에서는 타성에 적은 관료행정과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중복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www.kci.go.kr

〈표 7〉 중장기 전략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의 강약점과 과제

| 강 점 | 약점과 과제 |
|---|---|
| • NLK와 NAL이 통합되면 규모나 잠재적 역량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국가도서관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높아진다. 또한 NAL은 국가사회과학도서관 겸 의회전문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화할 수 있다. | •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 부처별 이기주의, 집단 중심주의, 현실안주 심리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국가백년대계를 우선하지 않으면 NLK, NAL, NAK의 시스템적 통합 내지 소속부처의 이관 등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 • 일부 선진국처럼 NLK와 NAK가 통합되거나 적어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공존할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전략형 국가도서관 체계는 미국의 LC처럼 NLK에게 배증의 역량과 역할을 요구하는 반면에 인적 역량이나 의식수준 등은 취약하므로 구심체에 걸맞는 역량강화와 인식제고가 필수적이다. |
| • 주제별 국가도서관의 설립 및 전략적 체계화를 통하여 외국의 고품질 STM 정보를 수입 및 부존 자원화함으로써 정보제국화에 대처하는데 유리하고 당대 뿐만 아니라 후세의 연구경쟁재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 | • 국정 최고책임자의 전략적 판단과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 및 주제별 도서관은 상호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며, 중복성이 더욱 심화되고 방만한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 |
| • NML이 설립되고 KISTI와 KASDiL이 국가도서관으로 격상되면 대학 및 기업체의 더 많은 연구자를 현재적 및 잠재적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다. | • 주제별 국가도서관(NML)의 설립이 불투명하며, KISTI 및 KASDiL의 지위격상을 통한 국가도서관화도 난제에 속한다. |
| • 특히 NLK, NAL, 주제별 국가도서관(NSTL, NML, NLA 등)의 수평적 연계고리 및 협력기능이 견고해지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역량이 높아져 국가 연구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 • 주제와 대상이 다양한 여러 국가도서관 의 체계를 혁신하는데 따른 주도권 논쟁과 반발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수평적 연계성 강화는 고사하고 대립과 경계의 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 • 핵심 지식문화기관들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정책을 주도할 국가위원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정책기구가 각인될 것이며, 지식문화를 중시하는 선진국일수록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인식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외연을 지식문화기관으로 확대하고 명칭과 성격을 개편하는 전략은 당위성과 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인식 공유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 • 국가 지식문화기관의 연계성 강화로 지식문화재 및 연구경쟁재의 수집·제공기능이 제고되어 중장기적으로 문화대국 및 지식강국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 국가의 지식정보정책을 입안·결정하는 고위층은 여전히 지식문화재와 연구경쟁재가 문화대국을 통한 지식강국의 요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국가 연구경쟁력에 대한 기여는 고사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마저 취약한 국가도서관 체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없다. 비록 국내의 다른 도서관보다 비교우위에 있을 지라도 현재의 부실한 국가도서관 체계로는 선진국의 정보제국화 전략에 대처하기 어렵다. 구시대적 사고와 무사안일형 자세를 고수할 경우에는 어떤 모형도 체계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며, 부처중심주의 및 집단이기주의에 집착하는 한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제안한 집중형, 연계형,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전향적 자세를 전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 지식정보의 수집·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부존자원화여 선진국과의 간극을 단기에 좁히려면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전략형 체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ci.go.kr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요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에 기반하여 핵심 주제분야의 최우선 수용, 국가 법정종합계획 기조의 적극적 반영, 지식정보 수입국 입장의 고려, 지식정보 수급의 정합성 강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 추구를 논거와 원칙으로 삼아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형 체계화의 기본구조는 NLK를 실질적 중심관으로 하고 산하의 NDL 및 NLCYA와 삼각축을 형성하되, 전국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KISTI, 농촌진흥청의 KASDiL, 행정안정부의 NAK, 설립할 보건복지가족부의 NML, 입법부의 NAL(국회도서관), 사법부의 SCLK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형태이다. 이 방안을 선택하면 NLK 위상이 견고해지고, 상이한 주제별 도서관과의 협력활동도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연계형 체계화는 NLK가 실정법상 국가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국가도서관과 주제별 도서관을 대등한 개체로 간주하여 수평적 연계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배경은 NLK의 고품질 STM 정보수집 및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다른 국가수준급 주제별 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을 통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입법부의 NAL과 대립하고 있어 모든 국가도서관의 구심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목상 NLK가 중심관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형과 유사하지만, 내용상 다른 행정부처 소속의 국가수준급 주제별 도서관과 수평적 대등관계로 규정하며, 집중형에서는 STM 정보분야의 국가도서관을 NML로 한정한 반면에 연계형은 KISTI 및 KASDiL을 주제별 국가도서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는 연계형 체계정립의 기본구조 가운데 NLK · NAL · NAK를 기능적 내지 시스템적으로 통합 · 조정하고, KISTI를 주제별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정보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센터로 격상시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도서관 위주의 체계정립을 넘어 모든 지식문화기관을 전략적으로 아우르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IMLS, 영국의 MLA, 캐나다의 LAC와 CISTI, 일본의 NDL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은 선진국의 정보제국화 전략, 지식정보 수입국 입장, STM 정보의 부존화와 연구경쟁력 강화, 국가 지식문화기관의 공분모와 연계성, 통합형 국가정책기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자체에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

다만 어떤 방안이든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전향적 자세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품질 지식정보의 수집 ·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부존 자원화하여 선진국과의 간극을 단기에 좁히려면 연계형 국가도서관 체계정립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전략형 체계화의 예비단계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ci.go.kr

# 참 고 문 헌

[1]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2008.『國立大學圖書館報』, 26: 321.

[2]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동위원회.

[3] 윤희윤. 2006.『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및 핵심지표 개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윤희윤.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현안과 과제.『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31-54.

[5] 윤희윤. 2009.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급)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69-96.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국내외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 현황과 KERIS의 주요 사업방향: 2005년도 전국대학도서관대회. [cited 2009.5.5]. 〈www.riss4u.net/etc/fileDownLoad.jsp?file_name=03_2005_library.pdf〉.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해외 학술정보 수요 및 이용행태조사를 위한 설문분석 결과』.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 e-나라지표. 2009. "출판현황" [online]. [cited 2009.5.1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48〉.

[9] Akie, Ronald & Joel Baron. 2004. "The Demand Side of STM Publishing : Understanding Value Creation in New Market Units." *Learned Publishing*, 17(3): 211-217.

[10] CISTI. 2007. *CISTI Strategic Plan 2005-2010 : Exploiting Information for Innovation*. Ottawa: Minister of Industry.

[11] European Union. 2008. *Statistical Portrait of the European Union 2008*.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2] Forfás. 2005.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2004*. Dublin: Forfás.

[13] Hook, Peter A., Katy Börner, and Kevin Boyack. 2005. "Mapping the Disciplinary Diffusion of Information." [online]. [cited 2009.4.18]. 〈http://www.ccsr.uiuc.edu/UCS2005/audiosections/PPTwithoutMP3/HookPeter.ppt〉.

[14] Houghton, John. 2000. *Economics of Scholarly Communication : A Discussion Paper*. Canberra: Center for Strategic Economic Studies Victoria University.

[15] Houghton, John W., Colin Steele, and Margaret Henty. 2003. *Changing Research Practices in the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Canberra: Department of Education.

[16] Japan Book Publishers Association. "An Introduction to Publishing in Japan 2006-2007."

www.kci.go.kr

[online]. [cited 2009.6.10]. 〈http://www.jbpa.or.jp/en/pdf/pdf01.pdf〉.

[17] Japanese Economy Division. 2005. "Japanese Publishing Industry." *JETRO Japan Economic Monthly*, [online]. [cited 2009.5.15]. 〈http://www.jetro.go.jp/en/reports/market/pdf/2005_42_r.pdf〉.

[18] Leydesdorff, Loet & Ismael Rafols. 2007. "A Global Map of Science Based on the ISI Subject Categories." [online]. [cited 2009.6.20]. 〈http://users.fmg.uva.nl/lleydesdorff/map06/texts/map06.pdf〉.

[19] Moya-Anegón, Félix et al. 2004. "A New Technique for Building Maps of Large Scientific Domains Based on the Co-citation of Classes and Categories." *Scientometrics*, 61(1): 129-145.

[20] Rostum, Hussein. 2003. *The Information Imperative : A Framework for Measuring Impacts of STM Information Services and STM Information Organizations*. Ottawa: CISTI.

[21] Rosvall, Martin and Carl T. Bergstrom. 2008. "Maps of Random Walks on Complex Networks Reveal Community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5(4): 1118-1123.

[22] Stark, W. and A.E. Bourgeois. 2003. *Building the STM Knowledge Infrastructure : A Feasibility Study*. Toronto: Federal Science eLibrary.

[23] Tenopir, Carol & D.W. King. 1998. "Designing the Future of Electronic Journals with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 Economic and Use Patterns of Scientific Journals."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4(2) [cited 2009.4.19]. 〈http://www.press.umich.edu/jep/04-02/king.html〉.

[24] Tenopir, Carol and Donald King. 2000. *Towards Electronic Journals : Realities for Scientists, Librarians and Publishers*. Washington. D.C.: SLA Publishing.

[25] World Trade Organization. 2007.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Geneva: WTO.

[26] 文部科學省 科學技術政策研究所 科學技術指標プロジェクトチーム 編. 2004.『科學技術指標 : 日本の科學技術の體系的分析』. 東京 : 文部科學省.

[27] 歲 森敦. 2004. 日本國內における學術雜誌の購讀狀況：電子ジャーナルを中心に. [cited 2009.5.15]. 〈http://www.kc.tsukuba.ac.jp/colloqium/040715.pdf〉.

[28] 歲森 敦 外. 2005.『電子情報環境下における科學技術情報の蓄積·流通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研究』. 東京 : 國立國會図書館.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www.kci.go.kr

[1] Council On National Colleage & University Library. 2008. *Gukripdaehakdoseogwanbo*, 26: 321.

[2]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Doseogwanjonghapbaljeongyehoek : 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3] Hee-Yoon Yoon. 2006. *Haksulyeonguservice(RISS)ga Yeonguseonggwae Michineun Giyeodo Pyeongga Mit haeksimjipyo Gaebal*. Seoul: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4] Hee-Yoon Yoon. 2007. "Policy Issues and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31-54.

[5] Hee-Yoon Yoon. 2009. "Analysis on Systematization and Gap of Subject-based National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69-96.

[6]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5. *Guknaeoi Yeongujungsimdaehakui Doseogwan Hyeonhwanggwa KERISui Juyo Saeopbanghyang*. 2005 Korean Library Association General Conference. [cited 2009.5.5]. 〈www.riss4u.net/etc/fileDownLoad.jsp?file_name=03_2005_library.pdf〉.

[7]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6. *Haeoi Haksuljeongbo Suyo Mit Iyonghaengtaejosareul Wihan Seolmunbunseok Gyeolgwa*. Seoul: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8] e-National Indicatior. 2009. "Chulpan Hyeonhwang" [online]. [cited 2009.5.1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48〉.

www.kci.go.kr

www.kci.go.kr